

## 광주 아시아 포럼: SDMA 워크숍 발표문

박원석 국회의원

### <국문>

지난 5년간 한국의 시민들은 유례없는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권(사회적·경제적 권리) 전반의 극단적 후퇴를 경험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우려가 있는 월령과 부위) 수입 결정에 반대 하는 대규모 집회가 3개월가량 매일 같이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구속되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2009년에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를 무리하게 성사시키려는 공권력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거권이 정면으로 충돌해 5명의 시민과 1명의 경찰이 죽고 말았다. 그 해 여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때는 단전, 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소화전 차단 등 비인도적인 조치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향해 테이저건 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서 일방적인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체포·연행·구속을 집행하고, 집회·시위 자체를 불허했으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국가보안법이 다시 맹위를 떨쳤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보진영의 후보자들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후퇴한 자유권과 사회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정치권의 과제이기도 했지만 시민사회들의 과제이기도 했고, 수 많은 시민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따라서 많은 후보자들이 당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해 보편적 복지의 실현, 비정규직 차별 축소, 노조활동 보장, 무상 보육·교육 실현, 언론의 정치적 독립, 표현의 자유 보호와 같이 사회권과 자유권의 회복을 위한 공약 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지난 18대 국회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민주진보진영 후보자 들이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선거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사회권의 확장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권은 자유권에 비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해당 권리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및 정책 여력을 집중하고, 여력이 남으면 그 이행을 일부 지원하는 정도에 그쳐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간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다수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되고 4대강 사업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면서 국가가 사회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내가 중점적으로 제기했던 공약도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사회권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당선 이후 UN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용돈수준에 불과해 노후 보장의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 하는 한편, 세제 개편을 통해 한쪽으로 치우친 부의 집중을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융이 자금을 담보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더불어 입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그 해법을 강구한 바 있다. 그 첫 번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강제노동을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동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수확시기에 벌어지는 아동강제노동은 국제시민사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다. 이에 따라 세계의 유명 기업들도 제품생산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조폐공사는 오히려 우즈베키

스탄의 면화공장을 인수해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면화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즉각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 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의 실태를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여전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는 유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지난 5월 5일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은 비준하였음에도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국가정책과 법제도가 국제 심사의 대상이 되어 당사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과도한 국가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먼저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함께할 것을 제안해 함께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고, 추이를 지켜본 이후 정부가 계속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 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선이후 막 일 년이 된 시점이라, 오늘은 이정도 까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같이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작은 성과부터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은 국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선거 그 자체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시민들이 요구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투표시간의 연장이다.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반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나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대표로 선출되기에 어려운 조건에 있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의 확대 등도 인권의 가치를 선거 그 자체에서 오롯이 반영되

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개혁이 주요한 화두 중의 하나다. 앞으로 앞서 말한 사회권의 보장 뿐 아니라 정치개혁의 주요과제로 인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에도 힘을 쏟을 생각이다.

## <영문>

Korean citizens have suffered from severe retrogression of civil liberties as well 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the past 5 years.

In the year of 2008, massive protests opposing Lee Myong Bak administration's unilateral decision on US beef import has been held for three months continuously. During those period, the right of assembly of Korean citizens was disregarded. As you may know, numerous protesters were arrested and jailed. And I was also one of them.

In the year of 2009, tragic incidents have occurred in rows.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five people and a SWAT policeman tragically lost their lives due to the collision between public governmental power that enforced urban redevelopment plan and residential right of the forcefully relocated residents seeking to preserve their living foundation. In summer Ssangyong Motors' Union workers on a strike were under inhumane treatment given no drinking water, no food, no electricity, and no medical supplies. Furthermore, riot police shot taser gun at workers. In Jeju island, the Lee government indiscriminately arrested and jailed residents and activists opposing Naval Base construction. No assembly was approved, and National Security Law became well-known rage again.

Under such social atmosphere, cases like above repeatedly happened during five years of Lee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most pressing mission for the 19th general election(2012.4) candidates from liberal-progressive side was restoration and promotion of retrogressed civil liberties and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It was mission for civil society as well as politics. And a majority of citizens also

demanded that it should be realized through the election.

Accordingly, a great number candidates pledged to restore and promote those rights through universal welfare, reduc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of union activities, free education, free childcare, political independence of media, freedom of expression. As responsive citizens voted for those agenda, almost twice as many candidates from liberal-progressive side were elected than previous election.

Especially, promotion of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were emphasiz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Although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4 said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meaning of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in Korea remains vague. Korean government have merely pretended to support it, rather than actively protect and promote it.

However, given Lee administration's "Business friendly" policy(in reality pro-Chabol policy) led to deepening social economic polarization, and given "4-river restoration" plan without forming any social consensus generating adverse effect, voices began to rise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citizens'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Thus, my main campaign pledge as 19th general election candidate was expansion of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through universal welfare and fair economy. And ever since I was elected, I endeavored to do my duty. Bills that I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clude: Childcare Allowance Bill, Enhanced Basic Old-age Allowance Bill, Income Tax Law revision Bill,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

However, I found out that blind spots that could not disappear through legislative activity still existed.

Among them was Korean state-run company's Human-rights violation abroad. The Korea Mint took over a cotton company in Uzbekistan. But as it is widely well-known, cotton companies in Uzbekistan are notorious for child labor. The Korea Mint's company was not an exception. As a member of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member which has authority to control the Korea Mint I brought up this issue in the last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calling on suspension of business in Uzbekistan. I also hosted an open forum to find solution of Uzbekistani child labor, and I keep monitoring this issue.

Another blind spot which can hardly be lit through legislative activity wa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ssue. The Optional Protocol took effect as international law on 5 May 2013. Though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ICESCR, it did not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asserting that if ratified, state policy and law can be judg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at it would cost too much. But civil organizations and myself have urged the government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holding an open forum and press confer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I am considering introducing Resolution to push the ratification.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human rights in terms of election.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try to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 the election process itself. For instance,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many people requested extension of the polling hours. I think extended polling hours can enhance right to vote. Also in order to represent minority and neglected class of

peop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electorate system should be reformed.

Currently political reform became major agenda in Korea.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 will devote to my role in reforming election system reform as well as in promoting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First year of my term has just passed. I think to myself that despite my humble performance so far, I would like continue to make small changes through joint effort with fellow lawmakers and civil society.